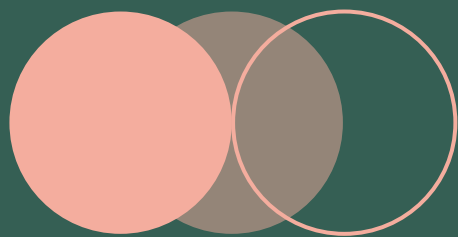

Seoul

2023
No.11

Economic

Issue Brief



서울경제이슈브리프

신3고 이후 서울의 민생경제 진단과 대응 방향¹⁾

1) 이 원고는 김진하 외(2023)의 총괄분야와 경제분야를 요약하여 작성

김진하 연구위원(서울연구원)

※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 서울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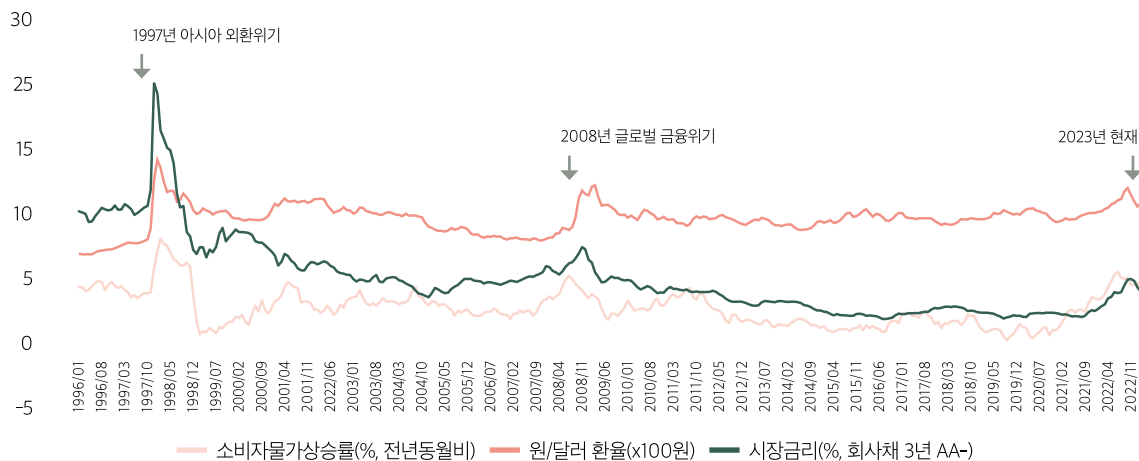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01 글로벌 경제구조 재편과 탈세계화의 사태에 신3고의 도래와 복합위기 확산

신3고 현상은 국제정치와 경제적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나

- 미·중 패권경쟁과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의 탈세계화 등 국제정치와 경제구조 변화는 글로벌 경기부진과 교역량 둔화로 이어져 고물가·고금리 현상 본격화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양적 완화, 연준의 빅스텝은 인플레이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긴축정책에 따른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환율마저 급격히 상승

[그림 1] 우리나라의 월별 물가·환율·금리 변화



* 주 1. 월별 자료로서 기간은 1996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임.

* 자료: 홍찬영 외(2022)

2022년 이후 근래에 경험한 적 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3고 현상 전개

- 우리나라와 신흥경제국가들의 자본유출 증대는 환율상승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로 화석연료 개발이나 관련 신규투자가 제한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에너지 및 식량의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가격을 끌어올림
-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으로 민간소비와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신3고가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국내 가계심리와 기업심리를 크게 위축

2023년 중반 우리경제의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신3고 현상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했으나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신3고는 여전히 지속

- 정부는 자동차·반도체 등의 수출 감소폭의 축소와 함께 고용시장의 양호한 흐름과 물가 상승세의 둔화가 나타나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기획재정부, 2023)²⁾
- 하지만,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경기에 민감한 환율과 유가는 당분간 변동 폭이 크고 고금리 기조도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3고는 계속 진행

2) 기획재정부는 매달 '최근경제동향'을 발간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2023년 9월호를 참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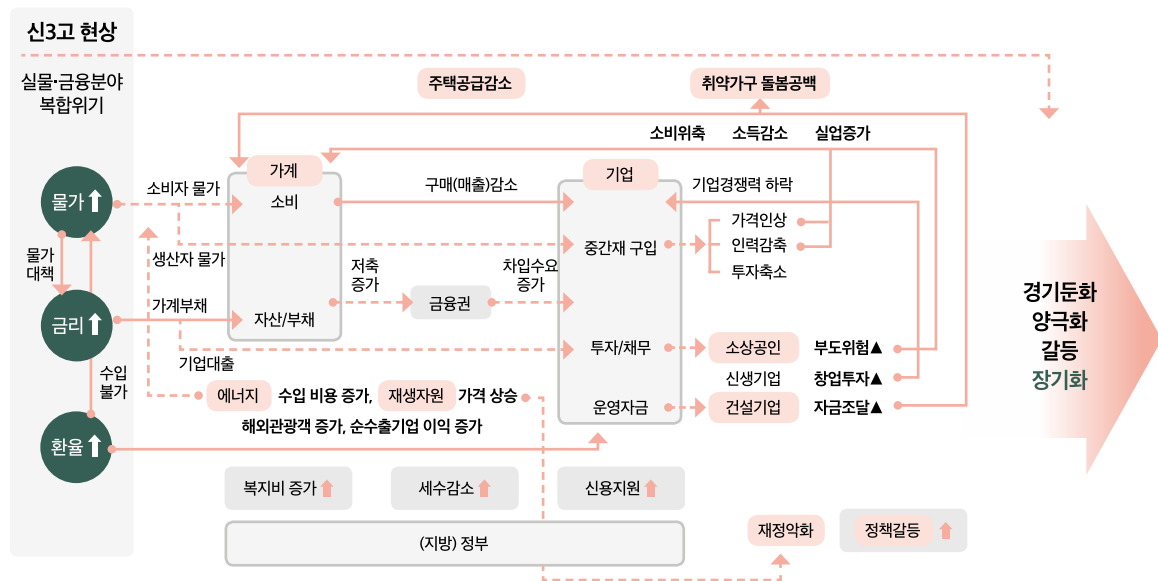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는 경기 하강을 유발

- 소비자물가가 오르고 이자 상환 금액이 늘어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소비위축을 초래
-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의 감소로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비용부담으로 인력을 감축하면 가계의 근로소득이 감소해 결국 가계 소득과 소비가 위축
- 가계의 구매력 저하는 기업의 매출하락으로 이어지고, 고물가로 인한 비용 증가는 기업의 투자여력 감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3고는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교란 등 전 분야의 복합위기로 확대

- 투자여력의 감소는 신규투자를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이 하락하며, 특히 건설기업은 고금리로 인해 대규모 자본조달이 어려워 건설부문이 침체되고 사회간접자본과 주택공급이 감소
- 가계의 소득감소와 소비위축, 기업의 인력감축에 따른 실업 증가는 취약가구의 돌봄 공백 위험을 증가
- 또한, 고환율에 따른 에너지 수입비용 및 재생자원의 가격 상승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
-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활동이 줄어들면 세수가 감소하게 되지만, 경기침체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복지비용이나 신용공급 지원 등의 세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적자재정을 더 심화하여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그림 2] 신3고의 전 분야 파급 경로



* 자료: 김진하 외(2023)

코로나19 이후 서울은 세계 다른 도시들에 비해 경제성장률 빠르게 회복

- 코로나19 이전 과거 20년 동안 뉴욕, 도쿄, 런던, 파리,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싱가포르, 서울 등 세계 9대 도시는 평균 3.98%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서울은 2.8%로 9개 도시 평균에 미치지 못함(박희석·김수진, 2022)
- 하지만 최근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0.1%를 기록하는 등 상하이(1.4%), 도쿄(0.2%) 등과 함께 경제위기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중
- 또한 서울의 실업률은 4.5%에 불과하고 물가상승률은 0.6%를 기록하는 등 세계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경제 부문에서의 안정화 속도는 빠른 편

IMF 외환위기를 겪은 서울은 민선8기에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경제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가동, 도시경쟁력 회복에 집중

- 서울은 과거 IMF 외환위기 시기에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
- 코로나19 시기에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통해 민생 회복을 지원
- 민선 8기 들어 서울의 10년 청사진인 '서울비전 2030'은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과 도시경쟁력 회복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와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경제 외적 분야의 취약성은 경제 성장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3고 이후 경제 외적 분야의 전환과 혁신 필요

- 신3고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도시인프라 사업 차질 등의 문제가 대두돼 그간 미뤄왔던 공공요금 인상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탄소중립 등 경제 외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
- 특히, 신3고 이후 재정 악화가 예상되므로 기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확대나 강화보다는 지원대상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 모색 필요

[그림 3] 신3고 이후 변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당면과제



* 자료: 김진하 외(2023)

02 신3고 이후 서울경제의 주요 분야별 위기 점검

① 서울의 가계 소비 부문 위기 진단 결과

서울은 민간소비·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물가가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둔화로 경기가 악화되면 다시 가계소득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발생

- 물가 상승이 서울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물가가 1% 상승하면 1년 후 서울시 소비는 1.7~3.4% 감소해 물가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 2023년 중반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였음에도 여전히 근원물가는 하방 경직적인데, 이는 가공식품, 섬유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로 근원물가가 더디게 둔화하고, 양호한 소비와 고용으로 서비스 물가는 경직적으로 움직인 데 기인
- 경제적 취약성이 큰 저소득층, 1인 가구, 청년 및 고령가구는 최근의 고물가로 물가 체감도가 더욱 높아졌고,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가구는 식료품과 비주류음료와 같은 필수소비 품목의 체감 물가상승률이 높음

신3고 이후 소득 1~2분위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고, 여기에 소득 4~5분위의 중산층의 부채도 최근 빠르게 증가

- 저소득층 부채의 절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크고 단기간에 부실 위험이 높은 기타대출의 비중 높음
- 특히, 소득 1~2분위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0% 이상인 가구 비중이 7~8%에 달하여 고위험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채 증가 속도도 소득 1~2분위의 금융부채는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의 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
- 저소득층은 원리금 부담으로 식비 지출 등 필수 생계비 지출을 줄이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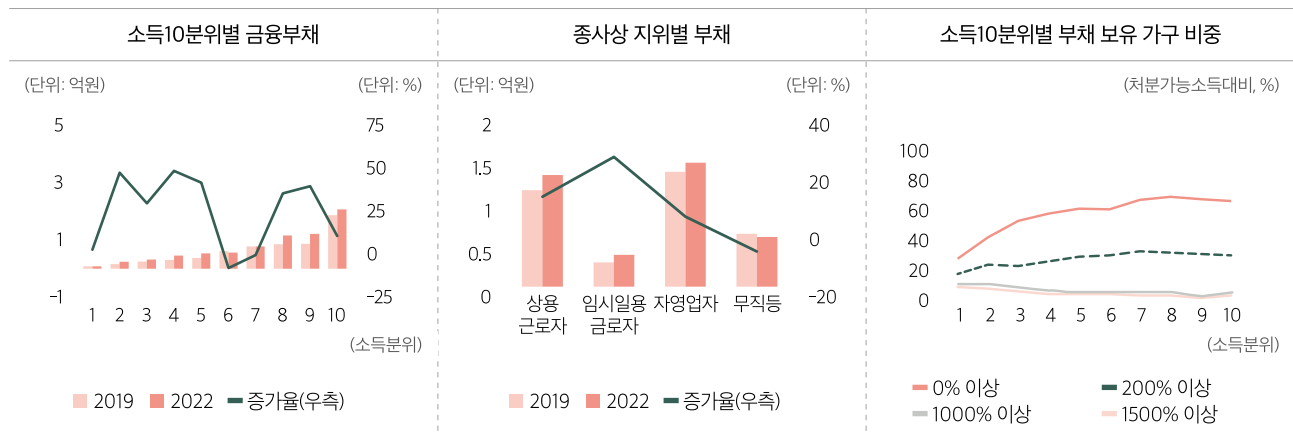
신3고 이후 최근까지도 해소되지 못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고물가를 유지할 가능성 존재

-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한 2차 파급효과에 주목할 필요
- 신3고 이후 품목별 물가상승률과 소득분위별 물가부담 등을 종합하면 식료품, 외식비, 에너지 품목의 물가 관리가 중요

취약계층 가계부채 부실화 모니터링 및 이자 지원 필요

- 취약계층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 확충이 필요하지만, 취약계층 지원이 다시금 물가를 자극하거나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별 지원
- 공공요금의 인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실화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이자 지원과 생계비 대출 연계와 같은 대응 필요

[그림 4] 소득분위별·종사상 지위별 부채



* 자료: 김진하 외(2023)

② 신3고에 따른 기업 부문 위기 진단

최근의 금리는 2000년 이후 전례가 없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물경제와 중소기업 대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 중소기업의 대출은 기준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신규대출 금리와 잔액대출 금리 차가 음수(마이너스)로 유지
- 최근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여 금리 차가 양수(플러스)로 증가하였고 이는 기업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신3고 시기 서울시 사업체의 부실위험을 추정한 결과, 3개월 이상 연체차주비율은 금리와 높은 동행성

- 신3고 시기에 연체대출 금액과 연체차주 비중은 2022년 금리 상승과 함께 증가하였으나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
- 하지만, 3개월 이상 연체차주의 비율 증가는 금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위험지표로 더 적합
- 혁신기술 역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역량이 낮은 유형의 기업에서는 연체차주비율이 급등

신3고 시대 고금리 상황에서는 연체차주비율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고금리 상황에 대비한 취약기업 지원체계 필요

- 산업별로 서울의 생산자 서비스업은 다른 지역보다 연체차주비율이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 서울의 생산자 서비스업에서 금리가 연체차주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제조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의 3배, 광역시·기타시도의 2배
- 서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혁신기업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

[그림 5] 서울시 연체차주 규모 추정



* 자료: 김진하 외(2023)

③ 신3고에 따른 소상공인 부문 위기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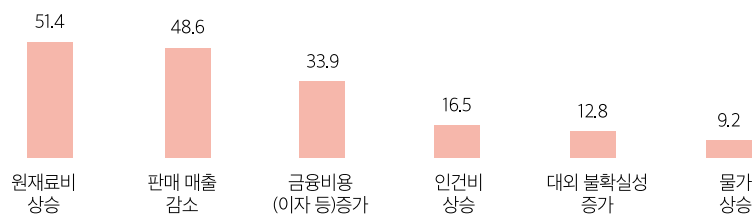
신3고 시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돼

-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의 소상공인은 사업체 수가 증가하였지만, 매출액은 뚜렷한 감소세
-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업체 수와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은 성장은 정체
- 코로나19 이후에 매출과 순이익률이 완만한 회복 중이었으나, 금리 인상은 자금 사정 악화를 초래하고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매출을 큰 폭으로 감소시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

소상공인 부채 규모 변화는 크지 않지만, 원재료비 상승으로 연체비율 높아져

- 소상공인들의 금융부채 규모는 최근 3년 전과 비교해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고, 1년 전에 비해서도 안정적인 수준
-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연체비율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카드대출보다 높으며, 그 원인으로는 원재료비 상승을 지목

[그림 6] 최근 소상공인의 금융부채 증가 이유



* 자료: 김진하 외(2023)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지원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금융 관련 지원 확충 필요

- 회복세를 보이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자금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자금지원 정책이 중요
- 신3고 이후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앞으로도 1~2년 정도 신3고의 영향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
- 신3고 현상이 지속되면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인하, 저금리 대출 지원,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대출 관련 지원 필요

03 신3고 시대 복합위기에 대한 서울경제의 대응 방향

신3고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가계·기업·소상공인 대상 부채위험 감지 시스템 시급히 마련

- 단기간 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부채를 경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마련
- 이자 지원과 생계비 대출을 연계하여 불법사금융의 노출이나 연체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

취약계층의 고물가·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전보다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식료품, 외식비, 에너지 품목은 이전보다 물가관리가 시급하므로 서울시민의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류 비규격 상품이나 계절상품 등을 원가로 판매하거나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푸드뱅크 등 중앙정부 정책에 서울시와 자치구의 동참을 검토
- 신3고 이후 고물가·고금리 부담에 더욱 취약한 취약계층은 생계비 부담 증가가 가계부채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과 이자 지원·생계비 대출 연계 등의 대응방안 마련
-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하여 부족분을 지원하되 취약계층 지원이 물가를 자극하거나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별적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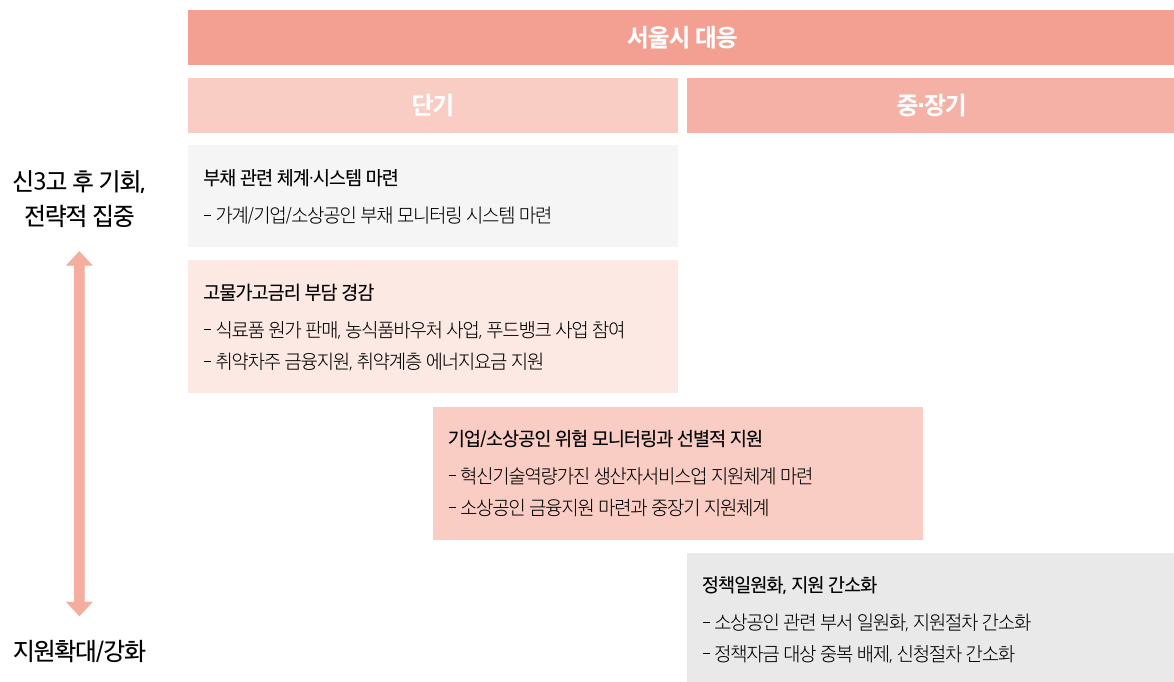
중·단기적으로 신3고로 인한 구조적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지원 체계 필요

- 현재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채는 여러 정책지원들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최근 신3고 현상 이후 연체차주가 증가하고 소상공인의 연체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 서울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산업별 혹은 역량별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고,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업종별로 특성이 다르고 역량별로 요구하는 지원에도 차이 존재
- 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역량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 필요

- 금융 부분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금융 경색을 예방하는 금융비용 완화 지원책 필요
-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련 조례와 지원 부서, 복잡한 지원 절차를 일원화 및 간소화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

[그림 7] 서울시의 경제분야의 시기별·상황별 대응 유형화 도식화



* 주 1. 체계마련/제도개선/다수대상

넓은 범위의 정책 대상

특정 정책 대상

* 자료: 김진하 외(2023)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23, “최근경제동향(그린북)”, 2023년 9월호.

김진하 외, 2023, “신3고 이후 서울의 구조변화와 대응 방향”, 서울연구원.

박희석·김수진, 2022, “글로벌 도시로 도약 위한 주요 도시별 거시경제지표 동향과 경제정책 방향 조사”, 서울연구원.

홍찬영 외, 2022, “신3고 시대 대응 사전기획 연구”, 서울연구원.